

대학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하 일 민

부산대 철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왜 필요한가.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전국이 입시지옥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고 온 국민이 홍역을 치르는 대학이 과연 그만한 존재이유를 갖고 있는가. 또 존재이유는 갖고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만일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 대학을 생각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이 술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세계화 속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기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일만 불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화, 국제화의 의미를 대학교육에 대입하여 생각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대학사는 반대학적인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대학의 본래 기능인 연구와 교육은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지만,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규제와 통제를 일삼았던 대학정책은 결과적으로 세계 수준에서 크게 뒤진 오늘의 우리 대학을 양산시키고 말았다. 대학은 더 이상 규제나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자유로워야 하고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대학교육 예산은 교육예산의 적어도 20~30% 수준에 이르는데, 우리는 고작 7~8% 수준을 맴돌면서 대학에 국가경쟁력을 높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면, 먼저 그러한 주먹구구식 관료적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GNP 5%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총교육비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대학이라면 대학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작업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서둘러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의 문제는 대학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교육관계 법령의 개정 작업이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제나 규제조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대학 운영의 중요한 기능은 인사, 재정, 행정이다. 이러한 대학의 핵심기능이 관료집단에 의하여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규제와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대학은 본래의 기능을 제한받지 않을 수 없

었고,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도 대학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집단이 여전히 대학을 지배하려는 전근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단지 대학의 불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장래의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다.

지금 교육법은 1990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면서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법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하루빨리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교육법 제117조는 1963년 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야 한다. 군사정권이 대학을 통제하기 위하여 없애버린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문민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진정 대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기를 원한다면 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속한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학칙 개정 승인 조항조차도 아직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있지 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오늘 우리 대학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에 되돌려주는 일에 정부는 더 이상 인색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새로운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대학의 제도 개편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이원화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은 현행 2년제에서 3년제로 개편하여 보다 고도 산업사회구조에 걸맞은 중간기능인력을 전담하게 하고, 부실한 사립대학도 원하는 경우 3년제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길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경쟁력 없는 부실 사학이 과연 얼마만큼 살아 남을 수 있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한때 시행되다가 없어진 5년제 전문학교(고교 3년+대학 2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부실 전문대학을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결시켜 전문학교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교육부의 과감한 직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초·중등교육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교육자치법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대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게 되면 중앙정부의 교육부는 교육정책부서와 교육지원부서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이 중앙정부에 교육부를 두지 않음은 충분히 연구해 봄직한 사례이다.

하나의 시·도에 하나의 국립종합대학이 되도록 여럿을 하나로 묶는 작업과 함께 사립대학의 5~10배에 이르는 국립대학 사무국 기구는 축소시키고 초·중등학교의 부족한 행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교사, 교수)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교육주체이다. 모든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지원업무로 제한시켜야 한다. ■

하일민/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의장, 부산대 교수회장,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시민사회의 철학』 등이 있고, "이론과 실천의 문제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